

김제, 지역기반 비자 정착지원금 지원사업 추진

비자 취득 후 1개월 이상 김제시 거주 외국인 대상 1인당 30만원 정착지원금 지급

김제시는 지역기반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 인재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기반 비자 정착지원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특화형 비자(지역우수인재(F-2-R), 외국국적동포(F-4-R), 숙련기능인력(E-7-4, E-7-4R))를 통해 유입된 외국인 인력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관내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김제시 지역기반 비자 추진을 통해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으로, 비자 취득

후 1개월 이상 김제시에 거주한 경우 1인당 3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외국인 인재의 초기 정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해 장기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신청 방법 및 세부 지원 요건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를 준비해 김제시청 투자유치과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역기반 비자를 통해 유입된 외국인 인재의 안정적인 정착은 지역 인구 감소 대응에 중요

한 의미를 가진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인재 유입을 확대하고, 관내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시는 제19회 암 예방의 날을 맞아 시민들의 암 예방 인식 제고와 국가암검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암 예방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김제시보건소 방문객과 전통시장 이용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국가암검진의 중요성과 암 예방 생활수칙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펼쳤다.

김서주 기자

완주군, 하천과 계곡 불법 정비 특별팀 가동한다

이종훈 부군수 단장 시설물 일제조사 진행 활동 들어가

완주군이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시설물을 근절하고 청정한 수변 환경을 조성하고자 '완주군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정비 시설 정비 특별팀(TF)'을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완주군은 이종훈 부군수 주재로 특별팀 첫 회의를 열고 불법 시설물 정비와 수변 환경 재정비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조치는 하천과 계곡에 무단으로 설치된 시설물을 정비해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한다.

이종훈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특별팀은 한 달간 관내 하천 및 계곡 등을 대상으로 불법 시설물 일제 조사를 진

행한다. 조사 대상은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44개소, 소하천 295개소, 세천 152개소, 구거 292km 등으로 군 전역의 물길을 촘촘히 살필 계획이다.

군은 이번 전수 조사를 통해 적발된 불법 시설물에 대해 즉각적인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과 과태료 부과는 물론 행정 대집행까지 병행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한 관련 부서장들은 특별 정비 추진계획을 공유하며 신속하고 철저한 집행 방안을 협의했다.

특히 이번 정비는 대통령 특별 지시에 따라 시행되는 사안인 만큼 군은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 조사를 통해 행정

의 실효성과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종훈 부군수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추진되는 만큼 부서별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고 체계적인 조사와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며 "체계적이며 정확한 조사와 정비가 이뤄져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계곡을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이 과수 화상병과 돌발해충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방제 약제를 배부하며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관내 배·사과 재배 158개 농가이며, 돌발해충은 399개 농가로, 이번 방제 약제를 관내 읍·면에 위치한 각 농업인상담소를 통해 해당 농가에 직접 배부한다.

이상호 기자

무주군, 안심 귀가 지원 '5백 원 통학 택시' 눈길

무주군 '5백 원 통학 택시'가 화제다.

17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500원 통학 택시'는 지역 내 중·고등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야간 자율학습 후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 학생 85명이 대상이다.

이용 학생들이 회당 500원만 부담하면 되며, 운영은 지역 내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소속 기사들이 맡아 학교에서 학생들의 거주지까지 안전한 귀가를 돕는다.

이 모 학생(무주군, 19세)은 "야간자율학습이 끝나면 밤 10시 정도 되는데, 집이 멀어서 늦은 시간에 택시가 아니면 가기 힘들다"라며 "백 원만 내면 편하고 안전하게 데려다주시니까 부

도민도 안심하신다"라고 말했다.

무주군은 통학 택시 운영에 앞서 지역 내 7개 중·고등학교 학생 중 통학 거리가 편도 2km 이상이면서 노선버스 이용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았으며, 학생들의 거주지를 고려해 34개 노선을 편성하고 기사를 배정하는 등 운행 절차를 마쳤다.

임재영 무주군청 산업경제과장은 "통학 택시는 야간자율학습 이후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 이동 수단이자 지역 내 택시 종사자들의 추가 소득원이기도 하다"라며 "모두에게 이로운 통학 택시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운영 관리와 기사 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서주 기자

무주군은 지난해 "농어촌지역 중고등 학생 통학 교통수단 운영 사업"을 통해 통학버스(전세버스) 1대와 통학 택시 33대를 운행했다.

한편, 무주군이 '무주형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진한다.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며, 돌보미 건강검진비와 함께 월 40시간 이상 활동하는 아이돌보미에게는 별도의 처우 수당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3월 기준 62가정, 105명)으로, 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야간 운영 확대·돌봄 특화 프로그램과 함께 지역 내 맞춤형 돌봄·공백 가정을 지원하는 '지역 돌봄 안전망'이 될 전망이다.

김서주 기자

진도군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설명회



진도군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진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지정함에 따라 진도군청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며, 진도군의 미래 먹거리 산업과 바람연금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이번 설명회에는 김희수 진도군수, 박지원 국회의원, 박근래 진도군의회 의장과 군의원, 김인정 전남도의원, 김미순 진도부군수 및 간부공무원, 7개 읍면 이장단장과 주민자치회장 등 약 80명이 참석했다. 군은 참석자들에게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했다.

진도 해상풍력 발전의 총규모는 3.6기가와트(GW)로 약 25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 생산될 예정이다.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의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약 5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은 물론, 기자재 생산과 유지보수, 항만과 물류 등 연관 산업의 성장도 기대된다. 진도군은 20년 동안 지자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집적화단지 지원금 약 3,084억 원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역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재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발전단지 조성에 따라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해 건설지원금 총 89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해당 재원은 주민에 대한 복지사업, 지역 기반시설 확충, 마을 소득사업 등에 활용될 계획이다. 주민 참여형 이익공유 모델도 도입되는데, 이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수익 중 일부를 주민과 공유하는 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수익을 통한 '바람연금' 제도가 추진될 예정이다.

주민들이 총사업비 약 20조의 4%를 투자하면 '바람연금' 제도가 시행되는데, 1세대당 연평균 약 436만 원 수준의 주민참여수익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년간 총 1조 4,260억 원 규모의 주민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진도군은 이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이 단순한 에너지 사업을 넘어 지방재정 확충과 주민 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끄는 새로운 지역 상생형 표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박지원 국회의원은 "진도군의 발전을 위해 군민들과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우덕현 기자

임실군, 초고령사회 대응 스마트 경로당

지난해 5개소 화상회의·IoT기반 화재감지기·이상음원 감지장치 시범도입



임실군이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어르신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의 43.7%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기존 대면 중심의 복지 서비스만으로는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복지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농촌지역 어르신들은 정보접근성과 사회적 교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디지털 기반 복지 환경조성이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스마트 복지환경 조성을 목표로 단계적인 사업추진에 나섰다.

임실군은 지난해 관내 경로당 5개소에 양방향 화상회의 장치와 IoT(사물인터넷)기반 화재감지기를 설치했으며, 이 중 2개소에는 이상음원 감지장치를 시범 도입했다.

해당 장치는 비명, 고성등 12종의 이상 음원을 감지해 통합관제센터로 즉시 전송해 위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오는 3월까지 임실군 노인종합복지관 내에 '스마트 스튜디오'를 조성할 계획이다.

다자간 영상통신 기반으로 구축되는 스마트스튜디오는 복지관과 경로당을 실시간으로 연결해 건강·여가·문화·교육 프로그램을 동시에 제공하는 거점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타 지역의 경우 스튜디오를 기반으로 실시간 건강체조, 노래교실, 문화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참여형 콘텐츠' 운영을 통해 어르신 참여율과 만족도를 크게 높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신승민 기자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임실군 역시 보다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이동이 어려운 어르신들도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며, 어르신 간 교류 활성화와 사회적 고립감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올해 관내 경로당 15개소를 추가 선정해 양방향 화상회의 장치와 IoT기반 화재감지기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단계적인 스마트 인프라 확충을 통해 경로당을 단순한 휴식 공간에서 벗어나 디지털 소통, 학습, 건강 및 안전 관리 기능을 갖춘 지역복지 플랫폼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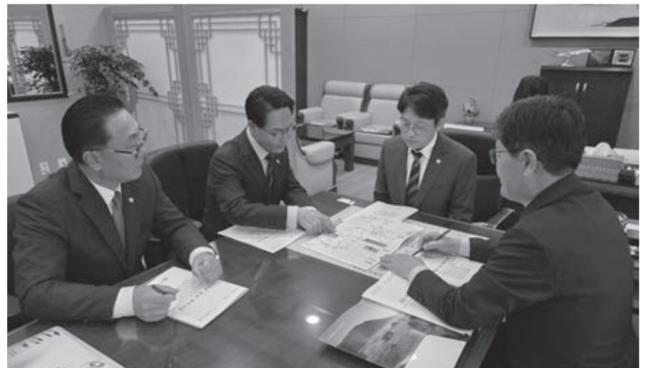
심민군수는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은 어르신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에 맞는 스마트 복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임실군만의 선도적인 스마트 복지 모델을 구현하고, 어르신들이 더욱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실군농업기술센터는 한국생활개선전북연합회가 주최하고 전북농업기술원이 주관하는 '2026년 생활개선회원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임실군과 장수군 생활개선회 임원을 포함한 회원 40명을 대상으로 실생활에 바로 적용 가능한 디지털 활용 기술과 자기 계발을 위한 이미지 브랜딩 과정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신승민 기자

국토부 제2차관 면담, 핵심 SOC 사업 건의

최우선 과제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



고창군수가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만나 서해안 철도를 비롯한 지역 핵심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강력히 건의했다.

특히 이번 건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전북도 타운홀미팅에서 서해안철도 건설사업과 노을대교 사업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한 이후 이뤄진 후속 대응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고창군은 최우선 과제로 서해안철도(새만금-목포) 건설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건의했다. 해당 사업은 새만금에서 목포까지 약 110km를 연결하는 국가 핵심 철도사업이다. 서해안철도는 단순 지역사업이 아닌 국가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서의 위상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또한 ▲고창읍 우회도로(국도23호선) 개설 ▲국도22호선(공음~상하) 시설 개량 ▲국도77호선(동호~금평)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상습 정체 해소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인프라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중장기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전략 사업인 ▲무장-공음 국지도 15호선 확포장 사업과 ▲고창-담양 고속도로 연도 개선사업은 상습 정체 해소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인프라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노을대교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교량 공병 조기 확충과 총사업비 증액 및 타당성 재조사 면제를 건의했다. 고창군수는 "건의사업들이 반영될 경우 서해안권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임 기자

광주시 남구, 우리동네 위험요소를 알려주세요

"빈집 담벼락이 불안해서 어디에 말해야 할지 몰랐는데, 주민점검 신청제 덕분에 한시름 놓았어요."

광주 남구 관내 주민들이 생활 속 위험 요소 점검을 구청에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남구는 "2026년 집중안전점검 기간을 맞아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주민들이 주변 위험 시설에 대해 점검을 신청하는 주민점검 신청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점검 신청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 중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직접 점검을 요청하는 제도이다. 안전 점검을 신청하면 구청 담당 부서와 전문가들이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점검이 이뤄진다.

신청 대상은 균열이 발생한 노후 건축물을 비롯해 다중 이용시설, 공사장 주변 시설, 어린이 이용 시설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이다.

현재 공사 중이거나 단순 민원, 관리 주체가 있는 시설, 분쟁으로 인해 소송이 진행 중인 시설 등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거주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안전신문고 앱 및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남구는 해당 기간 내에 접수된 시설에 대해 현황 확인 및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실시하며, 현장 여건과 위험도 등을 고려해 안전 점검이 필요한 시설을 대상으로 위험 요소를 걸러내는 작업을 진행할 계

획이다.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 주체에 통보해 후속 조치까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주민이 참여하는 점검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 속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 주월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시금치과의원과 협력하여 저소득층 아동 20명에게 1인당 10만원 한도에서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마련했다.

손권일 기자